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년 9월 11일(금) 15:00
배포일시	2026년 9월 11일(금)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담당자	정영호 KDI 대외협력실장 (044-550-4655) 조희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부장 (044-211-1160)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 개최 결과

- 일 시: 9월 11일(금) 14:00 ~ 18:00
- 장 소: 서울 양재 엘타워 멜론홀(5F)
- 주 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9월 11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개최

- AI 대전환과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세입 여건의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한 대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안과 분야별 투자 방향을 살펴보고, 기대효과와 우려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잠재성장을 반등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모색
- 토론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세션 1.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 [세션 2.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국가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재정의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실질적인 정책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강조
- 김세직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정이 현재의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장기성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재정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투자되어야 할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축사에서 2027년 예산안이 혁신적·효율적 개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국가채무비율을 낮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결실이 미래세대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힘.
- [세션 1]에서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2027년 예산안이 재정 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낡은 구조를 과감히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

-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올해 추가세수 162.3조 원을 사업비 45.4조 원(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 12.5조 원, 여유자금 104.4조 원(세수 결손 대비 재정 안정화 활용 등)에 활용
 - 교육교부금 개편 절감액은 교육·인재 계정에 별도로 적립해 영유아·고등·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고, 교육분야 전체 투자 규모는 줄어들지 않도록 할 예정
-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언급
-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와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는 [세션 1]의 토론에 참여해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 방향을 평가
- [세션 2]에서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례적인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전액 소진하기보다는, 추세 상회 여부와 일시성이 확인된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적립·인출·평가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미래대응기금 운용 규모 전액이 신규지출액이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또는 국가채무 상환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 유동성 기준을 우선 충족하고, 재정 상황에 따라 채무 위험 완화와 집행 준비가 완료된 성장 투자를 신축적으로 추진하되, 독립적인 성과 평가와 국회 통제를 통해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세션 2]의 토론에서는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감.
- 종합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 9인이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보완 과제, R&D 투자 전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청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고,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김용남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이 참여

❖ 붙임 1. 세부 일정

❖ 붙임 2. 발표 요약문

❖ 별 첨. 토론회 현장 사진(9월 11일(금) 14:30 배포)

❖ 붙임 1.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 ~ 14:20	개 회 식 개 회 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 영 사 김세직 KDI 원장 축 사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14:20 ~ 15:00	세 선 1.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 발 표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토 론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정혁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5:10 ~ 15:50	세 선 2.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발 표 추가세수의 전략적 자산화와 미래대응기금 설계: 성장투자·안정화·채무관리의 지속가능한 조합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토 론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6:10 ~ 17:40	종합 토론 좌 장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 론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김용남 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
17:40 ~ 18:00	청중 질의응답
18:00	폐 회

❖ 붙임 2. 발표 요약문

[세션 1]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

발 표.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1. 2027년 예산안의 의미와 주요 내용

- (그간의 성과) 적극재정으로의 전면 전환을 통해 V자형 경제회복 견인
 - 정부 출범 직후 31.8조원 추경으로 경제흐름 전환 계기 마련, '26년 본예산 총지출 8.1% 확대, 중동전쟁 대응 26.2조 원 추경 최단기간 처리
 - 그 결과 금년 상반기 실질 GDP는 4년 6개월 만에 최고인 3.8% 성장
- ('27년 예산안의 의미)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의 과실을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
 - '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하여 30년 만에 IMF 위기극복 완수
- (총량) 총수입 880.8조원(+30.4%), 총지출 820.9조원(+12.8%),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Delta 0.1\%$, 국가채무 48.3%

(조원)	'26년		'27년 예산안(B)	증감 (B-A)		비고
	본예산(A)	추경		(B-A)	%	
- 총 수 입	675.2	700.6	880.8	205.6	30.4	· 역대 최고 증가율
- 총 지 출	727.9	753.0	820.9	93.0	12.8	
- 관리수지 (GDP대비, %)	$\Delta 107.8$ ($\Delta 3.9$)	$\Delta 107.6$ ($\Delta 3.8$)	$\Delta 3.1$ ($\Delta 0.1$)	104.7	97.1	·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
- 국가채무 (GDP대비, %)	1,413.8 (51.6)	1,412.8 (50.6)	1,519.8 (48.3)	106.0	7.5	· 기존 계획(1,533조원) 대비 10조원 이상 낮은 수준

- (재정운용혁신) 전략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제도를 전면 혁신
 - (미래대응기금)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필요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
 - (지방우대) 지방우대 원칙 적용사업 대폭 확대(7→61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2.8조 원), 지방 자율편성 포괄보조 확대(10.6→11.9조 원)

- (공정한 재정원칙) 조세 지출을 재정 전환하여 소득재분배 및 국민체감도 제고, 재정 지원의 성과가 국민에게 환류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

* 조세지출 재정전환(17개 사업 총 1.9조 원), 지분투자형 R&D 도입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0.3조 원) 등

- (지출구조조정) 재량지출 △38조 원 + 의무지출 △69조 원 역대최대 성과
·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 구직급여 지급 조정(7~6일)

- (투자중점) ①「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②미래 성장엔진 확충, ③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④K자형 양극화 대응, ⑤국민 안전·평화 등

- ① (3대 메가프로젝트 + AI) 반도체(1.3→3.4조원)·피지컬AI(0.9→3.1조원) 투자 대폭 확대, 프런티어급 AI 모델 구축(4.7조원, GPU 1만장), 전력·용수·산단 인프라 지원(2.1조)
- ② (미래 성장엔진) 2030 달착륙(0.2→0.6조원), 자율주행 실증차 200→3,000대,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43만대, 창업·재도전 지원(2.6→4.5조원), K컬처 문화강국(2.8→3.7조원)
- ③ (청년) 교육·일자리·자산·주거·혼인출산양육·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43.3조원)
- ④ (양극화 대응)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 농어촌기본소득 17→35개 지역, 지방국립대 30개교 전액장학금 지급, 소상공인 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0.7조원)
- ⑤ (안전·평화) 핵잠수함 개발 착수, KF-21 양산(1.4→3.3조원), 자원안보기금 신설(1.4조원)

2. 미래대응기금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반도체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전략적 활용 필요

- ①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른 재정여력을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중한 실탄으로 활용할 필요

- ②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규모 세수의 전략적 투자 필요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 추세* → '40년대 0%대 전망

* 잠재성장률 추이(OECD 경제전망, %): ('86~'90) 9.5 ('91~'95) 8.8 ('96~'00) 6.1 ('01~'10) 4.6 ('11~'15) 3.4 ('16~'19) 2.8 ('20~'24) 2.5 ('25) 1.9 ('26°) 1.7 ('27°) 1.5

- AI 확산에 맞춰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향후 2~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시기

-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경우, 골든타임 실기 우려

③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특정 핵심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수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 마련 필요

- 세수 변동성 발생시 경기동행적 재정운용* → 경기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발생(재정의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 약화)

* (경기 확장기) 차년도 세수 증가 → 확장적 재정운용 → 과열 심화, 물가 자극
(경기 둔화기) 차년도 세수 감소 → 긴축적 재정운용 → 침체 심화

- 내국세 수입과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변동 → 지방 재정운용 안정성 저하

* 내국세 수입 × (지방교부세) 19.24% / (지방교육교부금) 2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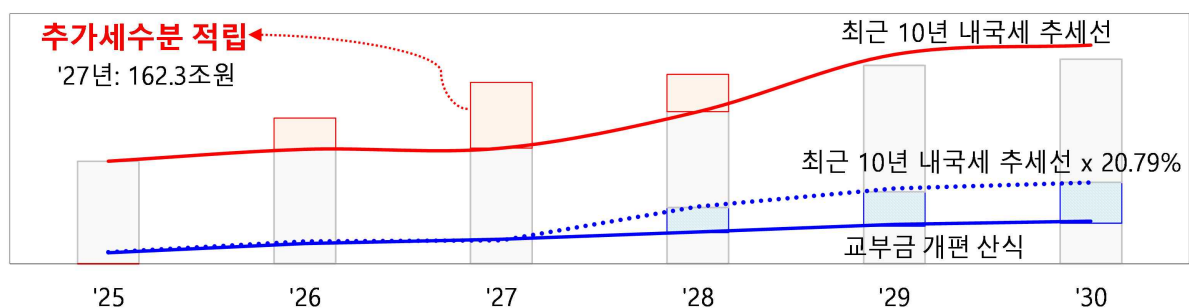
□ (주요내용) 27년 추가세수 162.3조 원을 기금에 적립, 사업비 45.4조 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 원, 여유자금 104.4조 원에 활용

○ (수입)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15~25년 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 162.3조 원

* '27년 추세치 = '25년 결산액 × (1 + 최근 10년('15~'25년) 연평균 증가율)²

-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하회하는 절감재원은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

* 전년도 교부금 × (1 +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 × [1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 (지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NEXT 원칙* 사업 45.4조 원

* ^N자본축적(New-Capital), ^E과감한 투자(Enterprising), ^X탄력적 집행(fleXible), ^T시급성(Timely)

○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 12.5조 원

○ (여유자금) 약 104.4조 원 + α*

* '26.9월 세입재추계로 내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26년 증가분 추가 적립

- 정책적 필요시 추경 없이 기금 변경으로 탄력 대응 가능

[세션 2] 미래대응기금 운영방안 및 분야별 투자방향

발 표 추가세수의 전략적 자산화와 미래대응기금 설계: 성장투자·안정화·채무관리의 지속가능한 조합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주요 제언)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되, 이를 위한 합리적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목적별로 재원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운용하는 기금을 만들면, 세수가 갑자기 줄거나 늘었을 때, 진행 중인 투자를 중단하거나 재정을 급격하게 조정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다만, 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이 저절로 좋아지거나 나라 살림이 저절로 튼튼해지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
 - 기금 설치·운용 성과는 독립적인 재원 검증, 명확한 적립·인출 규칙, 합리적 사업 평가 체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달려 있음.
 - 평소보다 더 건한 일시적 세수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성장 투자·재정안정화·국가채무 관리에 합리적으로 나누어 배분하되,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함.
- (기금 설치 배경) 이례적인 대규모 세수 증가로, 보다 유연한 재정 운용 방안 모색의 필요성 증대
 - (재정 여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이례적인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업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올해 7월 정부는 2026년 명목성장률(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성장률)을 12.3%로 전망했는데, 이는 1996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치임.
 - 또한 2027년 예산안의 국세수입(584.4조 원)은 2026년 추경예산(415.4조원)보다 40.7% 높은 수준임.
 - (재정제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재추계, 세계잉여금 제도 등 세수 변화에 대응하는 기존 제도는 있으나, 이례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장기 자산·성장 투자·재정 회복력 확보에 균형 있게 배분하는 논의는 부족

- 일시적으로 세수가 크게 늘면 실제 필요와 무관하게 지출이 늘어나기 쉽고, 지방 교부세 등 정산 과정에서 재정 충격이 발생할 우려
- 이번 세수 증가는 규모와 불확실성 모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재정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정 제도를 모색할 필요

□ (기대효과)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 형성, 투자 연속성 확보, 재정 충격 대응력 강화

- 경제의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 형성에 기여
 - 지식 확산, 인적자본(교육·기술) 형성, 생산성 병목 해소, 민간투자 유도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 '합리적 사업 구성을 통한 생산성·세입기반 개선→재정 여력 확충→후속 투자·미래 자산 형성'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기대
-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음.
 - 일반 예산은 매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보편적 서비스에 재원을 나눠주는 데 강점이 있지만,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재원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운용하고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데 강점이 있음.

□ (개선 방향·제안) 재원 마련, 기금 운용, 국회 통제에 관한 사전 합의

- (재원 마련) 추가세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기금 출연을 위한 차입은 금지하며, 세목별 시나리오와 민감도를 공개해 불확실한 재원이 고정 지출로 굳어지지 않도록 함.
- (기금 운용) 안정화·투자·채무 관리 기능별로 운용 규칙을 분리하고, 4대 사업 계정(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에 공통 사업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지방·교육 분야의 안정성과 형평성도 함께 보장함.
- (국회 통제)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은 국회 승인을 받게 하고, 부채·금융자산·운용 비용·다년도 성과를 통합 공시함.